

#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 Analysis of Relativ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

박 재 희\*\*·전 대 옥\*\*\*·최 인 수\*\*\*\*

Park, Jaehee·Jeon, Dae Uk·Choi, In Su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
- IV. 결론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년 기본과제인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21)」 연구 중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1. 11. 17. 심사기간: 2021. 11. 17. ~ 2021. 12. 7. 게재확정일: 2021. 12. 7.

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 주제어: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위원회, AHP 분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public safety services through th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s well as customized public safety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as a joint responsibility for public safety affairs with the stat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academ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uch as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but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analysis on local police works.

In this study, reflecting the initial experi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analyzed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works of the local police using a AHP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ocal police legal works was in the order of investigation activity, life safety activity, traffic activity, and event-related activity. As of the importance of local police legal works, life safety activities and traffic activiti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activities or event-related activities. As the local police system i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differentiated local polic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lativ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s and to keep the original institutional purpose of providing safety services suitable for each region.

□ Keywords: Local Police System, Local Police Work, Local Police, Local Police Committee, AHP Analysis

## I. 서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로 경찰권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시·도 경찰청에서 국가-자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다.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시설의 설치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인력 이관이 없다.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첫째, 기존의 사무분석은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국가경찰이 수행해 왔던 사무로부터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제의 정비라는 제한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사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보기에 다소 이른 시점이었다.

즉, 자치경찰제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일률적으로 법정 사무로 제시한 이후 본격적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이러한 사무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합성, 업무량, 중요도 등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반영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에 있어서 자치경찰 법정 사무에 대하여 지역의 현장에서 인식하는 비중과 중요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는 1948년 미군정 시기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 재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추진 여건 불비로 시행이 유보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하였고<sup>1)</sup>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 안을 유지하였으나 법제화는 무산되었다.<sup>2)</sup>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국가 중심의 경찰체제에서는 민주적인 경찰조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 활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경찰행정, 지역주민의 복리 및 민생치안 증진에 기여하는 치안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제도 및 행정의 분권화가 추진된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경찰권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sup>3)</sup>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에 따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 노력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홍익표 의원안은 2017년 11월 발표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권고안<sup>4)</sup>의 내용(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 운영)과 2018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

1) 당시 「지방분권법」 제10조(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법적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③이다.

2) 박재희·한부영·최선미(2019).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참조, 정권별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과 중단 배경은 최종술(2017)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박재희, 한부영, 최선미(2019).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2017). 2017.11.7자 보도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참조

안<sup>5)</sup>(국가경찰 43,000명의 자치경찰 이관)을 혼합한 안이다(황문규, 2020). 홍익표 의원안은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자치경찰관서와 국가경찰관서의 이중적인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원 및 장비의 이중적 배치, 자치경찰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의 증가,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 업무혼선과 치안 공백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황문규, 2020).<sup>6)</sup>

홍익표 의원안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제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2020년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과도한 경찰 권력의 분산을 목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관련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김영배 의원안은 자치경찰 조직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이원화 모델(20대 국회 홍익표 의원안)과는 달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은 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과 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 각기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sup>7)</sup>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별도의 경찰조직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sup>8)</sup>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그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전부개정, 이하 “경찰법”으로 약칭)로 변경되었다. 법안은 총 3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은 주로 제1장 총칙,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8장 보칙에 규정되어 있다<sup>9)</sup>

5) 자세한 내용은 김순은(2018),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황문규(2019),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제17권 제1호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2019),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 5. 17; 최미경(2020),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NARS 현안분석 제131호; 황문규(2019),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기대역할과 한계 및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5호; 황문규(2020),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박재희·이행준(2020).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박재희(2021).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 2.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법」은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찰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sup>10)</sup>(경찰법 제3조)범위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 수사사무 등을 포함한다.<sup>11)</sup>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sup>12)</sup>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sup>13)</sup>

자치경찰의 사무에는 수사에 관한 사무도 일부 포함되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sup>14)</sup> 수사사무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

9) 자세한 내용은 박재희·이행준(2020).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참조.

10)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1)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12)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13)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14) 박재희·이행준. (2020). 울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참조

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를 포함한다.<sup>15)</sup>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49호, 2020.12.31 제정, 이하 “자치경찰령”으로 약칭) 제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시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관할지역의 인구, 범죄 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적절한 규모로 정할 것,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 3. 선행연구 검토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법학 및 경찰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선 선행적인 논의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장일식·강용길(2021)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김재한(2021)은 자치경찰의 시행과 발전의 동태적 과정에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원식(2017)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과 원칙에 입각하여 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제언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현빈(2021)은 국가경찰의 사무와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한 법적 구분이 능사가 아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무발굴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중(2016) 및 김재호·김원중(2013)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경험을 기초로 이를 국가 수준에서의 자치경찰 업무로 확장하는 시도를 수행하였으며, 양재열(2017)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의 사무현황 분석을 통해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박재희 외(2021)는 전남 자치경찰 시책개발의 일환으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 분야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범위와 역할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제의 비교분석 등이 주된 연구내용 및 방법 등으로 볼 수 있다.

15)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참조

16)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 내용들은 2020년 이후 경찰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정된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사무의 범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거나 사무 발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박재희 외(2021)의 연구는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나,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의 법적이거나 선형적인 논의와 정성적 연구를 탈피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경험적이며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그간 수행하지 못했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자치경찰제의 초기 시행 경험을 반영하는 사무분석을 추진하고자 한다.

### Ⅲ.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

####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Saaty, 1990)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범주화된 항목들의 계층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 및 고유치(eigenvalue) 계산을 통한 계층화 분석법(AHP)은 다기준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도출이나 범주들로 체계화된 자료 간 비교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치경찰 사무의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는 없다.

자치경찰 사무는 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및 수사 활동 등으로 범주화되고 이들 상위 범주에서 구체적인 하위 범주들로 체계화되며, 하위범주별로 세부 업무들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계층적 구조 하에서 하위 범주별로 특성화된 사무들로 구분되고 있어 계층에 따른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부 업무들의 경우 업무 관련성 또는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부 업무 간 쌍대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어, 사무분석은 법령 등에서 제시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3~4부의 설문 응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sup>17)</sup> 계층화 분석법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기반하므로 설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나 통계적인 모집단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나, 연구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의 고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동 설문은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약 1분기 정도의 경험이 축적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총 응답부수는 53부이며, 그 중 계층분석 응답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기준 이하인 8부의 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45부(유효응답율 84.90%)를 대상으로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 2. 설문 항목의 구성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을 위해 설정한 자치경찰사무의 상위수준(대분류) 및 하위수준(소분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경찰사무의 첫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대분류는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수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의 소분류를 중심으로 두 번째 계층을 구성하였으며, 각 상위수준(대분류)에 따른 하위수준(소분류)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자치경찰령 별표에 제시된 소분류별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항목 간 업무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세부적인 항목별로 차별화된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분류 및 소분류를 중심으로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수행하였다.

자치경찰사무의 비중은 자치경찰 법정 사무를 중심으로 각 사무의 소분류별로 리커트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사무의 비중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보다 엄밀한 분석이 바람직하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과 연구의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로 갈음하였다.

17) 심사자 중 한 분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의 세부적 이해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의 이해는 어느 정도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대분류 및 소분류<sup>18)</sup>

대분류	소분류
지역 내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지도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기타 교통안전·소통 관련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경비)	
수사 사무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19세 미만) 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음란행위 및 공공장소 침입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

출처: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목

### 3. 분석 결과

#### 1)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분석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업무 비중은 지역 주민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수사 활동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분류에 대한 업무량 및 빈도를 9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의 유효수준은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소분류별로 개별응답이 표준정규분포 내에서 위치할 확률이 92.25%에서 99.86%로 나타났다(전체평균 96.13%).

18) 박재희·이행준(2020). 울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리포트.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참조.

〈표 2〉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 분석 결과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 평균	소분류 순위	대분류 평균	대분류 순위
지역 내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 운영	6.87	1	6.38	2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	6.27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6.07	6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6.73	2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6.13	5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6.20	4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7.29	1	6.36	3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	6.57	2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6.36	3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지도	6.07	4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5.86	6		
	기타 교통안전·소통 관련 사무	6.00	5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경비)		5.00		4	
수사 사무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19세 미만) 범죄	6.57	3	6.49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6.86	1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6.64	2		
	음란행위 및 공공장소 침입 범죄	6.14	6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21	5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	6.50	4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업무 비중에 대한 응답 결과를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수사(6.49), 생활안전(6.38), 교통(6.36), 경비(5.00)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안전과 교통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 운영(6.87),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6.73),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6.27),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6.20),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6.1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6.07)의 순으로 업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7.29),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6.57),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6.36),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지도(6.07), 기타 교

동안전·소통 관련 사무(6.00),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5.86)의 순으로 업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6.86),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6.64), 학교폭력 등 소년(19세 미만) 범죄(6.57),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6.50),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6.21), 음란행위 및 공공장소 침입 범죄(6.14)의 순으로 업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 사무 중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7.29)이 가장 높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5.00)는 가장 낮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 2) 자치경찰 사무의 중요도 분석

자치경찰 사무의 대분류, 소분류별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는 각 분류별 쌍대 비교 문항의 결과에 대한 비교행렬 연산을 통해 산출하였다<sup>19)</sup>. 또한 일관성 검증을 통해 응답의 일관성이 떨어지는(CI < 0.1)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자치경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근무지의 지역적 특성 응답을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대도시, 도·농복합지, 농산·어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에 대한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표 3〉 자치경찰 법정 사무 대분류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전체	대도시	도농복합지	농산어촌
생활안전 활동	0.372	0.478	0.382	0.159
교통 활동	0.252	0.268	0.265	0.147
경비 활동	0.186	0.108	0.161	0.475
수사 활동	0.190	0.146	0.192	0.219
일관성지수(CI)	0.0028	0.0067	0.0057	0.0112

19) 계층화분석법(AHP)의 특성상 전문가 설문에 의한 델파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므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한 표본 응답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응답 수가 크지 않은 경우 매트릭스 연산 과정에서 상대적 가중치가 편중되거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자치경찰 법정 사무 대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수사 활동, 경비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에서는 전체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에서는 경비 활동,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생활안전 활동 관련 사무의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농산어촌에서 경비 활동과 수사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분석된 것은 농산어촌의 범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안전 활동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표 4〉 ‘생활안전’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전체	대도시	도농복합지	농산어촌
순찰 및 시설 운영	0.193	0.199	0.171	0.205
주민참여 방법 지원·지도	0.130	0.132	0.101	0.173
안전사고·재난 긴급지원	0.166	0.152	0.167	0.187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0.287	0.322	0.334	0.168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0.224	0.195	0.227	0.267
일관성지수(CI)	0.0028	0.0067	0.0047	0.0112

‘생활안전’ 소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는 ‘사회적 약자보호,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 재난 긴급지원’, ‘주민참여 방법 지원·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에서는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가 전체의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농산어촌에서는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주민참여 방법 지원·지도’, ‘안전사고 재난 긴급지원’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중요도가 두드러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에서는 방문객에 대한 경찰활동과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교통’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전체	대도시	도농복합지	농산어촌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0.267	0.307	0.300	0.151
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	0.237	0.254	0.218	0.209
교통안전 교육·홍보	0.173	0.134	0.231	0.159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0.162	0.150	0.127	0.247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신고	0.161	0.155	0.124	0.234
일관성지수(CI)	0.0019	0.0043	0.0040	0.0050

‘교통’ 소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신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에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같이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과 ‘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 또는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무의 중요도가 높고 나머지 사무는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산어촌에서는 대도시나 도농복합지 등과 달리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각종 허가·신고’ 등이 중요한 사무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생활안전 소분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낮은 인구 밀도와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지닌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주민 인식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수사’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전체	대도시	도농복합지	농산어촌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0.246	0.234	0.220	0.166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0.276	0.298	0.214	0.156
교통사고·교통관련 범죄	0.170	0.141	0.193	0.159
음란행위 및 해당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범죄	0.095	0.101	0.132	0.16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0.085	0.096	0.106	0.184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 수사	0.128	0.130	0.135	0.170
일관성지수(CI)	0.0055	0.0043	0.0134	0.0008

‘수사’ 소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교통사고·교통관련 범죄’,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 수사’, ‘음란행위 및 해당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에서는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에서는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실종가족 수색 및 범죄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음란행위 및 해당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범죄’, ‘교통사고·교통관련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범죄수사 소분류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 사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도농복합지 등의 도시지역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이 중요한 수사사무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낙후지역에서의 수사사무의 수요는 도시지역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자치경찰 법정 사무로 제시된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수사 활동의 4대 영역 중 수사 활동,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의 순으로 근소하게 업무 비중이 높고, 경비 활동은 이 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이 가장 업무 비중이 높았고,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 장비 심의·관리와 아울러 생활안전 분야에서 순찰 및 시설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등의 업무 비중이 높았다. 수사사무의 업무 비중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출인·실종 가족 수색 및 범죄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쌍대 비교에 의한 법정 사무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 분야별 중요도를 분석한 박재희 외(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sup>20)</sup>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근린 경찰 활동에 최우선 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경찰 활동의 가

20)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로 응답자의 절반이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을 선택하였다.

사회를 통해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안전 활동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 위반행위 지도·단속, 순찰 및 시설 운영 등이 중요한 사무로 조사되었고, 교통 활동 분야에서는 법규위반 지도·단속, 시설·심의·관리, 교육·홍보 등이, 범죄 수사 분야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범죄 등이 중요도가 높은 사무로 제시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도·농복합지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간분포가 넓고 인구가 적으며 고령화가 심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치경찰과 주민과의 일상적인 협력 관계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관련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방법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3~4명의 응답이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를 더 정확하게 살펴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의 제도 시행 기간을 갖은 후에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51% 이상의 사무를 기준으로 자치경찰 공무원을 분류하는 방식에서는 사무에 대한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시행 초기에는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사무 간에도 협력의 시너지보다는 혼선의 비효율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고 현장에서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더불어 주민참여에 기반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7).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2017.11.7자 보도자료
- 고승희·조성. (2021).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 1-30.
- 김순은. (2018).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 김원식. (20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 107-116.
- 김원중. (2016).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3): 403-428.
- 김재한. (2021).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9(1): 265-289.
- 김재호·김원중. (2013). 자치경찰의 사무 역할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3(4): 109-130.
- 김흥주. (2019).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남재성. (2019). 국가경찰과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모색. 「한국경찰학회보」, 21(4): 39-69.
- 박재희·한부영·최선미. (2019).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박재희·이행준. (2020).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박재희·최인수·전대욱. (2021).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재희. (2021).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성수영·김상운. (2019).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573-580.
- 신원부. (2020).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진단과 평가: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2(5): 121-150.
- 양재열. (2017).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자치경찰연구」, 10(1): 109-138.
- 장일식·강용길. (2021).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97-119.
- 조현빈. (2021).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치안행정논집」, 18(1): 171-186.

- 참여연대. (2019).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 5. 17.
- 최미경. (2020).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NARS 현안분석 제131호.
- 최종술. (2019).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21(2): 199-222.
- 황문규. (2019).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17(1): 95-120.
- 황문규. (2020).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발제문. 2020.8.20.
- Satty, T. L. (1990).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ittsburgh: RWS Publication.

**박재희:** 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미국 주립대학교 교수의 다양성 관리 연구, 2015)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거버넌스 강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2021)”,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2020)”, “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2020)” 등이 있다(Email: jpark@krila.re.kr)

**전대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공학 박사(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상호작용, 2009)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방투자사업 관리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Resilience 이론과 지역경제 적용(2016)” 등이 있다 (Email. dujeon@krila.re.kr).

**최인수:** 독일 베를린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에서 환경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으로서 재직 중이며 주민주권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마을, 공동체, 주민주권, 주민자치 등이다. 주요 연구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2020),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202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2021) 등이 있다(Email: ischoi@krila.re.kr)